

보도시점 2024. 9. 1.(일) 배포 즉시

##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 8.31.(토),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 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 (6월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 1조 436억 원, 청산액 8,238억 원(청산율 79%)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근로기준정책관<br>근로감독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하창용 (044-202-7553)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강욱 (044-202-7521) |